10만명 붕괴 1년만에 2700명 줄어··북·남구 편입 3개案 마련

광주 동구 인구 감소 추이와 구간 경계조정 방안

광주시가 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하는 이유 는 자치구간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1번지' 광주 동구의 인구 감소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동구청 조직도 점차 축 소돼 공공서비스의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줄어든 광주 동구는 인구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구는 오 는 2018년까지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동구 인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9만9879명으 로 개청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달 말 기준 9 만7137명이었다. 1년 만에 2749명이 줄었다. 한 달 평균 250여명씩 동구를 떠난 셈이다.

동구는 1980년 북구청 개청 이후 시행된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 정책,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이전 등의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후주택 단지를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집단 이주가 늘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동구는 재개발이 하나씩 마무리되는 2019년 이 후에는 7190가구 1만8910명의 인구가 복귀해 10 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784가구 2000여명의 입주가 예상된 광 주 동구 월남2구역 입주가 시작됐지만, 다음 달 인구증가는 57명에 그쳤다. 이후 7~8월에도 인 구감소세가 250여명 선에서 50~80여명으로 줄 어들었을 뿐, 감소세는 여전했다.

대단위 재개발단지 입주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재개발 단지 입주도 감소세 못돌려 조직 축소·부청장 직급 하향 눈앞 市·정치권 총선 끝나자 논의 멈춰

되돌리지는 못하는 형국으로,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하지만 동구는 자구노력에 한계를 절실히 느

이같은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유 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내년 7월에는 부구청 장의 직급도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서기관 (4급)으로 햐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동구 인구 회복을 위해 갖 가지 방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수만명의 인구가 한꺼 번에 유입되는 것 외에는 단독 선거구 기준인 인 구 13만명선을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구는 ▲북구 두암1·2·3동, 문화 동·석곡동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1안과 ▲북구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일부를 편입하는 2 안 ▲동남을 선거구에 포함된 남구 방림1・2동, 백 운1·2동, 사직동, 양림동을 동구에 편입하는 3안 등 5만2000명~6만명의 인구가 포함된 북구와 남구의 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추진안을 마련하기 도 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끝나고 5개월이 지 났으나 여전히 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구는 애만 태우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찾은 안철수 "소녀상 철거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사죄받았다고 생각 하거나 (일본 정부가) 책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 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회복 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 "지금 박 근혜정부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특히 안 전 대표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녀상의 문제 도 포함해 계속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녀상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적절하 지 못하다. 소녀상은 상징이다. 그 상징에 대해서 어 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방문에는 같은 당 김삼화·신용현·권은희· 최도자 의원이 동행했으며 나눔의 집에서는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의원 185명, 20대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결성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절반이 훨씬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모임이 8일 결성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 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

이들은 회견문에서 "제정된 지 30여년 넘은 1987년 헌법 체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국민의 정치 불신 등 여러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국민 사이 에서 개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면서 "향후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 회에서 개헌 담론을 펼칠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의성에 대해 광범위

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한다. 권 의 원, 백 의원, 김 의원은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당 별로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

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선 원유철·김재경·이군현·정우택· 주호영·황영철 의원, 더민주에선 이석현·원혜 영·김진표·안민석·진영·노웅래·이춘석·박완 주·김두관 의원,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비대위 대 표와 박주선·주승용·장병완·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19대 국회 때는 150여명이 개헌모임 을 했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에도 진입한 의원들 을 중심으로 모임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는 "앞으로도 계속 참여 의원들을 모집,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을 넘기도록 하겠다"고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팎 거센 반발에…추미애 더민주 대표 전두환 예방 취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는 12일 예방하려 했다가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 자 8일 취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예방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의견 수렴에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 추 대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 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 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과 상의를 하기 전에

장이 많아 수용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측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국민통합과 화해를 위한 예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으며, 이 에 대해 참석 최고위원들은 전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위 안부 피해자 문제와 함께 얘기를 했다. 용서는 피해 자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관 최고위원도 "대표도 얘기하겠지만, 그 사

람을 용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우하고 이런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창현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 춘진 최고위원이 "국민통합을 위한 추 대표의 취지 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전화로 지도부에 전달했다 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국민통합 을 원하는 추 대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도 이제 광주에 찾아가 고개 숙여 사죄 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